

# 지방선거 앞 “통합 주청사 유치” 공약 남발 우려 목소리

지자체·출마예정자들 표심 얻기 공약에 행정통합 본질 왜곡  
“나주청사 유치” 현수막…무안군의회 의장 등 5명은 삭발까지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소재지 논란 등이 통합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도 6·3 지방선거를 120여 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이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통합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각 지자체와 출마 예정자들이 표심을 겨냥한 ‘정사 유치전’을 본격화하면서 통합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4차 조찬간담회’를 통해 행정통합의 명칭과 운영 원칙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정해졌으며, 가장 예민한 사안이었던 청사 문제는 현 전남 동부청사와 무안(남악)청사, 광주청사를 모두 유지하며 기능을 배분하는 ‘분산 운영’ 원칙을 세웠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청사 소재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가 1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출마 예정자들은 통합이라는 대승적 목표보다는 ‘우리 지역 청사 사수’라는 지역 이기주의적 공약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나주에는 이미 전남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인사를 명의로 ‘상생발전 통합 나주청사 유치’를 내건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라는 상징성을 앞세워 통합 청사를 나주로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통합은 전남도청이 다시 광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통합 주청사의 광주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무안과 순천을 각각 제2, 제3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광주 중심의 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논의의 틀을 더 넓혀 전북까지 우수는 ‘500만 호남대통합’을 제안하는 등 선거 국면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백기쟁영식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히자 나주·순천·목포 등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들은 공공기관 유치 실적을 선거 승리의 자립대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의회는 이날 오후 전남도청 잔디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청사 소재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진행된 이번 합의는 무안군민을 기만한 졸속 합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5명은 현장에서 삭발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주청사는 현재 전남도청인 무안청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

강기정 광주시장과 구청 관계자, 시민들이 27일 오후 광주 북구 양산동 북구문화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 시민공청회’에 참석해 통합 추진의 의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고 있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청사 유지 등 공약 경쟁으로 비화할 경우, 통합의 대의는 실종되고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나오는 통합 관련 공약들은 결국 ‘통합된 광주

·전남의 발전’이라는 상위 목적을 지향하는 수단에 불과한데, 공약을 통해 포퓰리즘적 접근을 하면 오히려 법과 관습에 암매여 유연성을 상실하게 된다”며 “정치적 상징성이나 공무원들의 거주 편의성 같은 사안을 확정적 공약으로 못 박을 경우, 정작 통합 이후 자치단체장이 밸류해야 할 유연한 행정 재량권이 ‘죽어’에 묶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통합을 둘러싼 비교적 큰 합의가 이뤄진 것은 지금이야말로 통합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때가 아니라, 통합이 가져올 미래 가치에 집중해 큰 틀의 합의를 지켜나가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 광주시, 광주·전남 통합 논의 도민과 직접 소통 나선다

전남 시·군 순회 ‘상생토크’…반대 여론 설득·공감대 확산 주력

광주시가 전남 일선 시·군을 방문해 광주·전남 통합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소통 행보에 나선다.

행정기관 간의 협상 테이블을 넘어, 지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들어 바닥 민심을 다지겠다는 ‘정면 돌파’의지로 풀이된다.

광주시는 29일 장성군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을 순회하며 도민 의견을 청취하는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의 추진 배경과 향후 로드맵, 그리고 통합이 가져올 지역별 시너지 효과가 상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한종 장성군수가 나란히 참석해 군민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직접 답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오는 30일에는 여수시, 내달 5일에는 영광군을 차례로 방문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향후 통합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광주 5개 자치구 ‘일반시’ 전환해야”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 촉구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5개 자치구를 독립된 자치권과 재정권을 가진 ‘일반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5개 자치구 체제로는 광주 구民이 전남 시·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권한을 갖게 되며, 행정적 불균형과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위원회는 “광주 자치구민이 전남 시·군과 동등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구와 광산구 등 인구가 많은 자치구에 걸맞은 자치권과 재정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특별시 추진위원회는 행정통합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 단체다.

이들은 5개 자치구를 각각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광주광산시로 명칭을 변경해 광주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위위원회는 “거점형 통합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단일 중심 구조가 중앙 집중화와 도심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특별시는 광역 전략과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고, 각 자치구가 독립적인 정책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구는 AI·광산업, 광산구는 미래차, 서구는 행정·금융, 남구는 에너지·교육, 동구는 의료·문화 분야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증-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암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